



보도자료

2021. 12. 1.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7’

“아파도 꼭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공약 발표

- 상병수당, 182개국 중 174개국에서 실시 중... OECD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만 미실시
- 소득 문제로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 모든 경제활동인구 대상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편히 쉴 권리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상병수당은 일하던 사람이 질병 등으로 쉴 경우 이로 인한 상실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전 세계 182개국 중 174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플 때 휴식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되선 안 된다”며,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은 생계곤란층과 자영업자, 직장인,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이다. 실제 많은 노동자가 임금 저하를 우려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물류센터나 콜센터 등 밀집된 공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하면서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의 국민이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며 상병수당을 간접적으로 체감한 바 있다” 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금과 상병수당의 유사성과 국민적 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일한 국민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다.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고 강조했다. (끝)

[붙임] 공약내용 및 Q&A

Q. 상병수당이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일하던 사람이 병으로 인해 쉬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상실 소득을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사회보장청(ISSA)의 격년별 조사에 따르면 세계 182개 국 중 174개국에 상병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마셜제도, 가나, 세네갈 등과 함께 이 제도가 없는 8개국에 포함됩니다.

상병수당은 팬데믹 시기 감염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직장 내 전파를 줄이고, 아파도 일하러 나가는 데에서 오는 노동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예방적 의료이용과 적기 치료율을 높이는 반면 치료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응급 의료이용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확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Q.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의 규모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제도에 GDP의 최소 0.2%에서 최대 1%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상병수당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적 특수성이 있을 것이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재정 규모를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제도의 설계를 보편적으로 하되 보장 수준이나 기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도입하겠습니다.

Q. 코로나 지원금은 주로 고용보험으로 지급되었는데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불안정노동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이러한 불안정노동자들에게서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상병수당의 근거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있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상병 시 소득상실

에 대해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더 넓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유급병가가 도입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데 상병수당의 확대가 필요한지?

현재 우리나라는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병가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업체 규모에 따른 병가 제공의 불평등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임의로 제공하고 있는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은 21.4%이나 1천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96.7%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2.0%에 불과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없거나 특정하기 힘든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는 전혀 관련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서 보편적 상병수당의 도입이 필요하고,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상병으로 인한 휴가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Q.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상병수당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정책입니다. 세계노동기구(ILO)는 짧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이후 조세 투입 등 추가재원 마련을 통하여 상병수당의 대상자를 확대(에콰도르,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필리핀, 중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하거나 격리나 가족 돌봄을 위한 상병수당을 확대(일본, 프랑스)하고 보장수준을 증가(아일랜드), 대기기간을 줄이는(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호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병수당 강화의 예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9년 H1N1 유행 시 유급병가가 없는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약 7백만명이 감염되었으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정 유급병가의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 13개주, 30여개 대도시에서 법제화된 예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유사 제도를 도입한 서울, 대전, 고양의 행보와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서의 백신 휴가 도입 등 선례를 참고하여 감염병 예방 등 국가위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설계를 할 것입니다.